

● 전·의경 제도 폐지 ● 해안경계 임무 경찰에 부여 - 警力 부족으로 治安과 安保에 심각한 공백 우려 -

정부가 향후 5년간 매년 20%의 전·의경을 감축해 오는 2012년까지 완전 없애는 한편 현재 準이 맡고 있는 해안, 항만 등에 대한 경계임무도 경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요즈음 시위현장이 쇠파이프는 물론이고 화염 방사기와 LPG 가스통까지 등장하는 과격 폭력 양태가 더욱 빈발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의경마저 없어진다면 이는 곧바로 민생치안의 공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치안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전·의경이 없어지면 당연히 집회 및 시위관리도 직접 경찰관이 맡아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는 필요인원의 30%는 경찰청이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또한 경찰청 충원에 따른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집회 및 시위 및 주요시설 경비, 교통관리 보조, 방범순찰 활동 등에 동원되는 전·의경 4만 7천여명중 30%(1만 4,100명)를 직접 경찰청으로 대체할 경우 최소 1,900억원(순경 1년 봉급 2,800만원 기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시위진압에 나서고 있는 전경대원들.

것이다. 경찰관계자는 『최소한 직업 경찰관이 전·의경 정원의 50~70% 가량 충원되지 않으면 시위때 치안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準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 항만, 인천공항 등 특정경비지역에 대한 경계, 방호임무도 2012년 경찰로 완전히 넘어 오는 것도 큰 문제다.

현재 4만 7천여명에 달하는 전의경이 사라진후 警力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찰관이나 해경만으로 드넓은 해안경계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해경은 최소 7천여명 이상의 전

경 인력이 있어야 해안 경계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방부와 여전히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 또한, 전·의경을 대체할 인원의 30%만 직업경찰로 충원할 계획이어서,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체할지 언급이 없고, 이에 대한 예산도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요한 것은 이 나라 치안과 안보에 생길 수 있는 심각한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다.

더욱 과격해 지고 있는 집회 시위대처는 누가 할 것이며, 드넓은 해안을 통해 침투해 오는 간첩들을 막지 못함으로써 오는 안보 위

협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최근 이택순 경찰청장은 『전·의경 감축이 시작되는 내년에 경찰관 2,800여명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당 경찰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보다 훨씬 적으며, 전·의경과 경찰관을 합쳐야 비슷한 수준이 된다』면서 『장기적으로 적정 규모의 인력 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 집행자들은 경력부족으로 원활한 치안서비스를 펼칠 수 없게 되는 데서 오는 치안불안은 물론 해안경비의 구멍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북의 위협으로부터 심각하게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냉정하게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북이 핵을 보유하고, 속전속결이 뛰어난 의무병(10년 복무) 117만명이나 양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은 68만명 수준인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복무기간도 2014년까지 24개월에서 18개월로 축소 추진함으로서 절대적 전력 열세 상황임)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남침이 가능하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처

경찰청, 정보통신부·시민단체 등과 공동 대책 마련



사진은 최근 경찰청이 사이버수사 역량을 홍보하기 위한 '사이버 캡' 홍보대사 위촉 장면.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가 지난 3월 5일 오후 2시 사이버 정책과 관련된 기관 및 시민단체·업체 등 29개 기관 및 단체를 초청, 「인터넷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인터넷 커뮤니티가 천거분위기에 편승하여 인터넷상 각종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인터넷상 범죄를 초기 진압함으로써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대통령 선거가 공정正大하게 이루어지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경찰청은 만 개에 이를 정도로 대대할 뿐 아니라, 최근 「만능열쇠 제조법」, 「대마초 채취법」, 「구입요령」 등의 유해 정보가 난무하고 있고, 더욱이 금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인터넷상 각종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인터넷상 범죄를 초기 진압함으로써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대통령 선거가 공정正大하게 이루어지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경찰청은 「최근 인터넷상 불법행위 수사사례 및 대책」을 소개하면서 수사절차상 또는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및 업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당부했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금년 7

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인터넷 실명제」 및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의 임시 차단권」에 대해 설명하고 인터넷 업체들의 협조를 구했다.

또한, 국내 최대 접속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포털업체인 (주)NHN(네이버)는 인터넷 불법행위에 대한 네이버의 대응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한편, 대표적인 UCC 업체인 (주)판도라TV는 「UCC를 이용한 명예훼손」에 대한 업체의 대응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참여기관 및 업체들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주거나 범죄를 유발시키는 각종 불법 사이트·유해 콘텐츠 등은 신속히 차단,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인터넷 실명제 등을 올바르게 정착시킴으로써 건전하고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진정한 IT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병원에 흉부외과, 성형외과 신설

-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

금년 하반기부터 경찰병원에 흉부외과와 성형외과가 신설되고, 그간 직제만 유지해 왔던 신경과도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소방전문 치료센터」가 설치되어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무료 진료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경찰공무원과 같이 위험업무에 종사하며 화상과 만성질환

에 시달려오면서도 의료복지부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소방공무원의 의료복지 개선에 경찰병원이 나선 것이다.

아울러 경찰병원은 우수한 의료진을 보장하고 PET-CT·MRI 등 최첨단 의료장비시스템을 확충하는 것을 비롯, 진료역량 강화를 위한 「병원정보시스템인 HIS(환자의 등록

에서 진료, 수납 등 모든 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의료정보 시스템)」를 구축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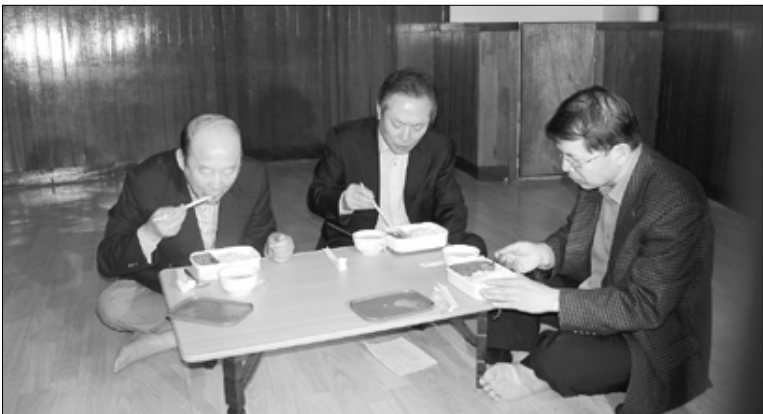
경찰병원 관계자는 「이번에 진료과목의 증설로 총 25과 1센터(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더불어 우수한 의료진 보강, 최첨단 의료장비시스템을 갖춘 초현대식 병원으로서 일반 대형병원과 경쟁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 수 있게 되었다.」면서 「전·현직 경찰관과 일반인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지휘부·「경찰 인권위」 합동 유치장 현장 체험

경찰청이 “현장속으로, 시민결연으로”의 정책방향 일환으로 최근 서울마포경찰서에서 수사지휘부와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합동으로 유치장 현장체험을 실시했다.

이날 체험행사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주상용 수사국장, 조용태 인권보호센터장, 홍성삼 마포서장 등 지휘부와 박경서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 유치인과 똑같은 절차로 신체수색(외표검사)을 실시하여 넥타이, 허리띠, 양말 등을 모두 영치하고 유치실에 입감되었으며, 유치인에게 지급되는 관식으로 점심식사를 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날 유치장 체험을 바



주상용 경찰청 수사국장을 비롯한 주요 참가자들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인용 식사를 하고 있다.

탕으로 유치인 인권보호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유치장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인권친화적인

유치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일선 유치인 보호관 근무여건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조직내부 自淨 및 공직기강 확립

- 경찰청, 청렴도 향상 혁신워크숍 개최 -



이택순 경찰청장이 직원들에게 공직기강 확립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3월 6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관에서 이택순 경찰청장, 본청 감찰 및 감사위원, 각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235개 경찰서 청문감사관 등 감사부서 근무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 향상 혁신워크숍 및 청렴 결의대회」를 갖고 경찰 내

부 자정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이택순 경찰청장은 「참여정부 초기에 비추어 경찰 청렴도가 향상되고 징계 등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아직도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청렴도가 국민 신뢰

확보 및 조직위상 제고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청렴한 경찰이미지 창출에 감사가부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내부 자정을 위한 솔선수범의 자세 확립, 신뢰하는 조직문화 창출 등 6개항에 걸친 결의문에 서약 후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을 벌였고, 국가청렴위원회 장태평 사무처장이 “청렴정책과 부강한 나라”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청렴도의 획기적 제고를 위해 이 같은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전 경찰관서에서 매월 청렴대책 추진회의를 개최해 부패친화적 문화 개선 운동, 부패취약 민원업무 대상 해피콜 정착 등 실효성 있는 청렴도 향상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렴한 경찰상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

〈1면에 이어〉

그리고 수사의 경우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수사에 자신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검찰은 자체수사인력을 가지고 강력, 외사, 마약, 컴퓨터수사 등 지금까지 주력해온 범죄수사를 진행하면서, '민생 경미범죄'의 경우는 1차적으로 경찰에게 수사를 위임하고 수사종결시에 지휘하는 방식이 현실적일 것이다"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찰이 현재와 같이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수사권을 갖고 수사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탁월한 수사를 하게 되면, 국민에게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검찰이 이중수사를 하는 불편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검사도 본연의 공소 유지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모두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민여론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여론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검찰 앞에 정부는 무리하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서 보류하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다.

정부는 조정위원회가 확인한 현실의 문제점과 시민의 여론을 바로 보고, 수사기관간 균형적이고 권한과 책임을 동반한 민주적 형태의 수사구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퇴직을 앞둔 경찰동지에게 알려 드립니다

회원등록

- 회원등록은 거주지 관할 경우회 지역회(대부분 경찰서 청사내 위치)또는 본인이 원하는 관할 지역회에 회원등록신청서를 경력증명서 1통(퇴직당시 근무관서장 발행)과 명함판 사진 1매와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회비는 년간 12,000원 이상이며 2년분 회비를 납부하면 2년간 유효한 회원증을 발급함
- 다만 평생회원은 회비가 200,000원 이상임, 신청용지는 시도회·지역회에 비치되어 있음

경우신문 구독

- 구독신청은 경우회 중앙회, 시도회, 지역회 등에 전화로 구독 신청을 하면 자택(직장)으로 우송해 드리며, 발송료는 년 1회 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지로용지(송금자 성명 명기)에 의거 납부하면 됨
- 발송료 : 연간 발송료 - 1만원
평생구독 - 10만원
- ※ 입금계좌 (우체국 : 012468-0151196 대한민국재향경우회)
- ※ 문의전화 : 02-2234-1881

무궁화회(골프포임)가입— 10년 이상 재직하고 회원등록 필한 자에 한함

- 무궁화회 등록신청서를 경력증명서 1통(퇴직 당시 근무 관서장 발행)첨부 경우회 중앙회에 입회비(500,000원), 년회비(100,000원)와 함께 제출하면 경우회가 주주로 되어 공동경영하는 기흥골프장(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신리 소재 36홀 규모)의 회원자격으로 월1회(매월 세번째 월요일) 이용할 수 있음
- 입회비 입금 계좌번호 : A팀 : 우리은행 1002-732-367584 이용상 / B팀 : 우리은행 1002-732-365645 이용상
- ※ 입회비 납부시는 납부사실을 경우회 중앙회 총무처장에 연락바람
- 등록신청서 용지는 경우회 중앙회(총무처)에 비치하고 있으며 전화가입 신청하면 직접 내방하지 않아도 신청용지를 우송해 드림
- 등록신청서 제출시는 명함판 1매, 반명함판 사진 2매, 경우회원증 사본 1부 첨부
- 부킹은 매월 1일~3일까지 09:00부터 경우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부킹메뉴를 클릭 신청<문의전화 : 02)2234-1881>

경우산악회 가입

- 입회비 30,000원(연회비 30,000원)을 경우산악회 총무에게 산악등산일에 현장에서 직접 납부하면 됨
- 산행일은 매월 세번째 목요일 오전 10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산행 예정지 등은 사전에 통지함